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와 석방된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석방...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 변수 '주목' 이번 주? vs 지연?... 선고일 초미 관심

국민의힘 “절차적 하자 확인... 현재, 신중히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尹, 헌정질서 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현재의 선고 시점과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오후 5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나와 관저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구속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이 구

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속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대검찰청이 하루 만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이 최종 결정됐다.  
50일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몸을 추스르고 의

부 활동을 자제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법원의 석방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의 법적·절차적 하자를 확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도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형사 재판 및 구속 여부와 현재의 탄핵 심판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구속취소로) 헌정질서 파괴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현재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는 이르면 14일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핵심판이 선고되면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될 경우 대통령 직위에 복귀한다.

## 국토부, 전국 공항 '로컬라이저' 개선 본격 제주공항, 시설물 구조 분석부터...

“김해 등 다른 공항과 달리 H형 철골 구조물 위에 설치”  
정부가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한 전국 6개 공항에서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기초대에 대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다만,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방위각 시설에 대한 구조 분석 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7일까지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공항 등 6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 사업 실시 설계 입찰 공고를 실시한다. 발주 기관은 한국공항공사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월 전국 공항 특별 안전 점검을 통해 이들 공항과 제주공항 등 총 7개의 공항에서 방위각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재질의 기초대에 놓인 다른 공항과 달리 제주공항은 H형 철골 형태의 구조물 위에 있어 별도의 구조 분석을 거친 뒤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해왔다. TF는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했다. 각 항공사 운항 안전 담당자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 시설 개선안을 확정하고, 설계 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 맞벌이 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맞벌이 가구 등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 보육, 등·하원 지원, 준비물 보조, 식사와 간식 제공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1253 가구 1964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낮았던 기존 중위소득 120~150% 구간과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이 높아져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제주도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비로 본인 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40~2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아이돌보미의 이동 거리에 따른 교통비를 지급해 읍면 외곽 지역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 사업과 관련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 찾은 외국인, 10% 제주행... 6면

시민의 사랑을 완성하는

## 도민의 선택으로 빛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현행**

**2개 행정시**  
(제주시 · 서귀포시)

**개편안**

**3개 기초자치단체**  
(동제주시 · 서제주시 ·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유지 + 주민참여 강화 실현!**